



# 보도자료

2020. 11. 19.(목) 배포

힘내라 대한민국

##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

- ◆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상 제시, 학습환경의 변화, 정책형성 과정 혁신을 위한 「인공지능 시대 **교육정책방향**과 핵심과제」 논의
- ◆ 국민 누구나 복지 급여 수급 가능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, 복지사업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표준화·간소화 추진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1월 20일(금)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.

### 「인공지능 시대 **교육정책방향**과 핵심과제」

-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사회·경제·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, 미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 - ‘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’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먼저, 인공지능 시대에 △「감성적 창조 인재」 육성, △「초개인화 학습환경」 조성, △「따뜻한 지능화 정책」 구현을 3대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.

**<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 >**

	인공지능(AI)의 영향	시사점	정책방향 도출
<b>인재상</b>	인간-인공지능(AI)의 협업시대 인공지능(AI)은 효율성, 인간은 창의성, 감성 등에 집중	인간 고유의 창의성, 인간 감성 이해, 윤리적 사고 등 중요	<b>감성적 창조 인재</b> 인간중심 사고에 바탕, 새 구조를 만드는 창의력
<b>학습환경</b>	인공지능(AI)은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학습방법과 자료 제공	학습자의 특성/수준/상황 맞춤형 개별화 교육 기대	<b>초개인화* 학습환경</b>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
<b>정책과정</b>	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등 기반 행정 혁신 시대 도래	교육 분야 빅데이터 관리·유통체계 필요, 데이터 활용 포용정책 기대	<b>따뜻한 지능화 정책</b>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, 혁신기술의 포용적 사용

\* 초개인화(hyper-personalization) :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고도화되는 개인 맞춤형 방식

- 첫째, 미래인재 양성의 방향은 「**감성적 창조 인재**」로 설정하였다.
  - 정해진 틀 안에서는 인공지능(AI)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므로, **정답만을 쫓는 학습목표와 방식에서 벗어나**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는 **독창적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**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.
  - 아울러, **인간의 감성을 이해·공감하고 타인과 소통·협업하는** 능력이 중요하며, 인공지능(AI)에 대한 **윤리적 판단력이 필수적**이라고 밝혔다.
- 둘째, 학습환경은 「**초개인화 학습환경**」으로 변화할 것을 예고했다.
  - 인공지능(AI)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**학생 각자의 특성과 상황, 수준에 맞는 교육**을 실시하고, 취약계층 지원,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.
- 셋째, 정책 형성과정은 「**따뜻한 지능화**」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.
  - **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환경**을 마련하고,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**교육 사각지대를 발굴·지원함으로써**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기본권 확대를 추진한다.

□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째, 자기주도적 태도를 기르고,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한다.

○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위해 공교육이 맡아야 할 주요 역할은 인공지능 시대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,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윤리적 태도를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성 등을 고려하여, 학교 교육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반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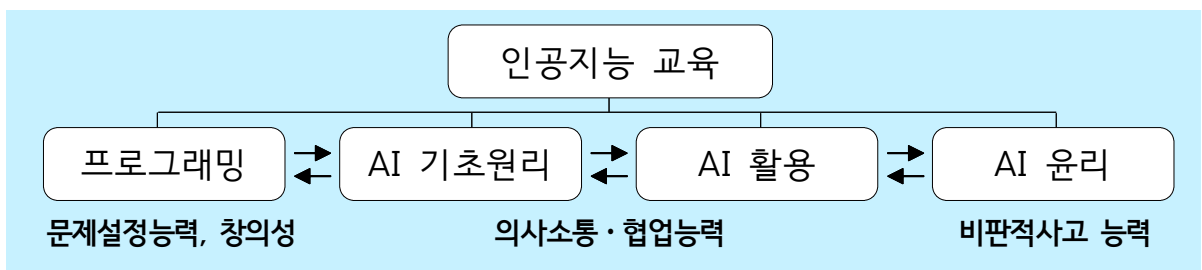
< 예) 자기주도적 태도 등을 고려한 미래 핵심역량의 방향 >

(기존) 2015 교육과정	(추가) 인공지능 시대 핵심역량 방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폭넓은 기초 지식 바탕</li> <li>· 다양한 전문 분야 지식, 기술,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</li> <li>· 새로운 것을 창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스스로 기존 구조를 파악, 깨트리기, 새로운 구조를 창조</li> <li>· 새로운 질문을 통해 새 해결법을 스스로 유도하는 방법 활용 등</li> </ul>

□ 둘째, 유치중고에 ‘인공지능 교육’을 도입한다.

○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‘인공지능과 놀이하기’, ‘친구들과 의견 모으기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(AI) 경험하기 등’ 학습자료 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한다.

○ 초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‘인공지능 교육’을 도입하고, 교육내용으로 △프로그래밍 △인공지능 기초원리 △인공지능 활용 △인공지능 윤리를 담는다.



-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인공지능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\*하여 보급하고, 고등학교에는 내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<인공지능 기초>, <인공지능 수학> 과목을 도입한다.

\* 초등학교 2종, 중학교 1종, 고등학교 1종 등

-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·컴퓨터 교직과목과 기본 이수과목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, 교육대학원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약 5,000명의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'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'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다.
- 아울러, 정보·인공지능 등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, 내년부터 영재학교(2개교)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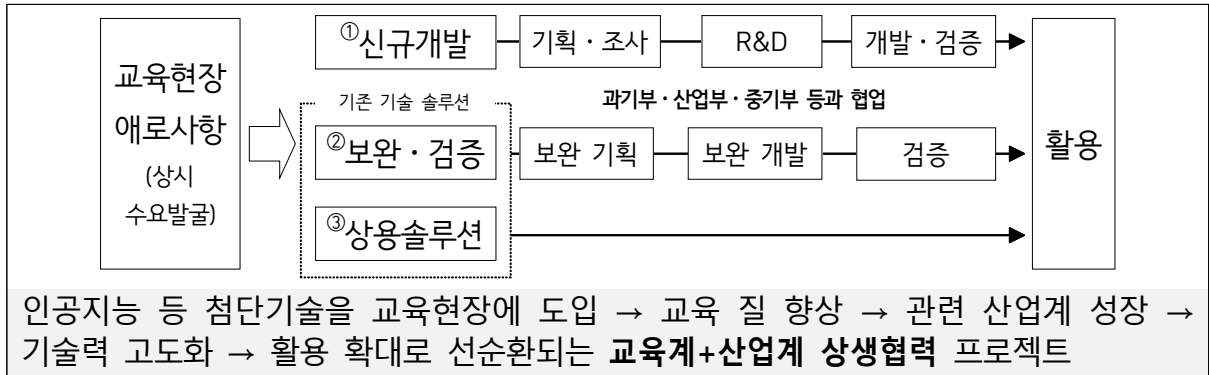
□ 셋째,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표를 개발한다.

- 정부는 각 부처와 대학 등에서 그간 다양하게 추진해 온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성적을 점검하고,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한다(2021년~).
- 이번 지표 개발은 쌓여 있는 각 정책들의 전략을 비교·분석하고, 정책효과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.
  - 학부에서 인공지능 소양함양을 위한 정책들은 물론, 석·박사급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재직자 대상 재교육·훈련 프로그램 등까지 망라하여 검토할 계획이다.
- 교육계는 물론 산업계,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와 공동으로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, 관련 보고서도 발간하여 정부 정책담당자와 대학 관계자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.

\* 예) 옥스퍼드 인사이트(Government AI Readiness Index): 국가차원 인공지능 전략, 전략, 데이터 법제 유무 등 포함, 각국 정부의 AI 정책 준비도 파악  
(2019년) 한국 26위 → (2020년) 한국 7위

- 넷째, 내년부터 공교육 질 개선과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「**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**」를 실시한다.

< (구상안) 「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」 추진 흐름도 >



- 이번 프로젝트는 미래의 주요한 교육이슈인 △**학습자 중심 환경** △**교육 취약계층 지원** △**학생안전 및 학교 업무효율화**를 우선 3대 분야로 선정하여,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이다.
- 교육부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**현장의 애로사항**을 분석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산업통상자원부·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연구 개발(R&D), 기술개발 등을 실시한다.
- 개발된 기술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, 에듀테크형 혁신학교 등 **미래형 학교모델**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산해나갈 방침이다.
- 다섯째,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보안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「**교육빅데이터위원회**」를 내년에 출범한다.
  - 위원회의 위원장은 **부총리 겸 교육부장관**으로 하고, 학생·학부모, 시도교육청, 연구자·교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빅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하며,
    - 교육 분야의 데이터 관리·유통과 관련한 **각종 지침(가이드라인)**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책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.
-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둔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,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후속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.

## 「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」

- 이번 안건은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득재산조사 기준을 유형화하고 표준화하는 방안이다.
  - 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각 사업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방법과 범위가 달라, 국민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엇인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.
  - 또한, 국민과 담당 공무원 모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, 충분한 상담을 통한 맞춤형 사업 안내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.
- 이에, 정부는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를 중심으로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
-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조사 기준 정비가 필수적이므로, 복지사업을 4가지 유형군으로 분류하고 유형군별 조사의 엄격성 수준에 따라 조사방식을 간소화한다.

< 4개 유형군별 조사항목 수 >

구 분		자산조사 엄격성	조사항목 수	
			현행	개선
① 기초생활보장사업군	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	↑ ↓	177개 (수기 82개)	
② 차상위사업군	차상위계층 지원사업		172개 (수기 79개)	110개 (수기 42개)
③ 기초연금형 사업군	상대적으로 기준선이 높아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사업		77개 (수기 19개)	75개 (수기 19개)
④ 바우처형 사업군	건강보험료 기준 활용사업, 지자체 사업 등		-	38개 (수기 3개)

- 기초생활보장사업군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현행대로 조사하되 개별사업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
  - 차상위·기초연금형사업군은 서류를 통해 조사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, 조사실익이 낮은 항목을 간소화한다.
- 또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바우처형 사업군을 신설하고,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30여개 항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.
- 조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상담시간이 단축되면,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상담 내용도 조사가 아닌 사업 안내와 신청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이러한 개선안은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에 적용한다.
  - 신규 사업은 4가지 유형군 중 하나를 선택하고,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
